

[기획]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사형제도 존폐 논란 왜 확산 되나요

■ 근대 이후 한국의 사형

“사법 살인” “범죄자 영구 격리” 팽팽

최근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형집행과 연쇄 살인범 유영철씨의 사형 집행 여부 등으로 국·내외에서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형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모습.

1 사형제도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제도입니다.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하는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로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 후세인 처형 비난 여론 왜?

후세인 처형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대부분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펼치고 있는 사형제도 반대 운동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사형제 폐지·유지국가는?

국제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현재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8개국이며, 사형제도를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29개국에 이릅니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88개국. 전시범죄(戰時犯罪), 군법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1개국이다. 그리고 사실

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30개국으로 유럽연합(EU)회원국들은 대부분 사형제가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의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사형제 국가입니다.

4 우리나라 사형 죄목은?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92조) ▲역적죄(與敵罪·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

한국 포함 68개국 사형제 유지...129개국 폐지

내란죄·살인죄·치사죄 등 사형 규정 범죄 16종

한 죄)(93조) ▲모방이적죄(적국을 위해 모방한 죄·94조) ▲시설공격죄(군대·요새·진전영 등을 적국에 제공한 죄·95조) ▲시설파괴죄(적국을 위해 본국의 군용시설 등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죄·96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 사형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에 대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가장 잔인하며,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특히 “인간의 목숨을 뺏는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며,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형제도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의 주된 목적은 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예방에 있다”면서 “사형제는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심신장애인 및 일부(姙婦)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합니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습니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신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6 사형제 존폐 논란 확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에 대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가장 잔인하며,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특히 “인간의 목숨을 뺏는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며,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형제도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의 주된 목적은 살인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예방에 있다”면서 “사형제는 사회질서 유지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사형제도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제도

전봉준 교수형 첫 사형 48년 이후 902건 집행 집행대기 사형수 63명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 첫 사형선고는 1895년 3월25일(양력 4월19일)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되고 4월 후부터 이문 권설재판소(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의금부(義禁府)를 개칭한 관청)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총 902건으로, 연평균 19명이 사형대에 섰다.

이 기간 중 김영삼 정권 말기인 지난 1997년 12월 23일에 대해 무더기 사형이 집행된 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한 나라에서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를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국내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국가가 되는 셈이다.

올 현재 국내에서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63명이 있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는 현재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무부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징역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 인력 부담 및 형량 효과 등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앞서 15대와 16대 국회 때도 사형제 폐지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어 오는 2008년 4월 임기가 종료되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Advertisement for Chonnam Gosi Academy (전남고시학원) featuring 9-month courses for civil service exams and agricultural/industrial training.

Advertisement for Gongin Chunggasa (공인중개사) featuring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nationwide agent training and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yung Real Estate (대인동심일부동산)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woo Real Estate (정우부동산)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ichee Real Estate (리치부동산)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Bright Real Estate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Cheonmyeong Real Estate (첨단월계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ungin Real Estate (국민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igh Rank Consulting (하이랭크 컨설팅)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